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2012.02.08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목차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3. 과도한 권력이 견제세력조차 없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되던 적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없다.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는 것은 단지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시장에 대한 독과점과 심지어는 골목상권까지 잠식해나가면서 중소기업, 자영업과 상인, 소비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재벌자녀들의 빵집, 외식업 진출이 단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문제를 삼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만큼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 현재 15년 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재집중되었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5대 재벌의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은 2010년 55.7%이고 이는 1997년 수준에 육박한다.¹⁾ 53개 대기업 집단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은 2009년 50.1%로 절반을 넘어갔다. 상위 100대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도 2008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가고 있다.²⁾ 동네 골목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세간의 느낌을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1) 새사연,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2012.1

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조사 보도자료”, 2011.12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재벌에게 경제력이 쏠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독과점이 생기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져서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와 노동자, 상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독점 대기업으로 이익과 부가 편중됨으로써 공평한 분배를 달성할 수 없어진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한쪽 끝에 재벌 대기업이 있다는 국민의 인식과 분노는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재벌개혁이 현재 시점에서 절박한 이유는 그 이상이다. 힘이 집중되면 그 힘은 남용된다.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나타나고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이 나타난다. 특정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 모든 자기 사업영역에서 독점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제운용의 틀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사회적 여론 형성과 정치적 방향마저도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³⁾ 사회 권력이 되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이미 이 반열에 들어왔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이를 대변해준다. 이 순간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3. 과도한 권력이 견제세력조차 없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재벌들이 이처럼 경제력 재집중을 통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법과 제도, 감독기관도 중요하지만 현실 사회구조에서 항상적인 견제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재벌집단과 같은 엄청난 권력집단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다.

물론 과거에는 재벌위에 정치권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3) 최정표, 2011, “재벌의 분할승계와 경제력 집중의 변화”

견제는 곧 재벌의 견제를 수반했지만 지금의 재벌은 정치권력의 힘 밖에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 “나라 안에 대기업을 공격할 만한 용기 있는 집단이 아무도 없다”면서 “정치권도 (대기업과)종횡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 같은 신세고, 훑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 생명을 걸지 않고는 다룰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고 국민들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통상은 노동조합이 재벌 대기업의 견제세력이 되어야 하지만 삼성그룹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재벌 대기업에서도 견제세력으로서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등의 경영참여는 먼 얘기고 우리사주조합 등을 구성하여 노동자가 주주로서 견제하는 것도 제한성이 너무 명백했다. 중, 장기적으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준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기업사회가 변해야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에는 재벌을 감시하고 견제할 만한 사회 세력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주주자본주의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로 소액주주 등을 참여시켜 자본 시장을 통해 재벌 대주주를 견제하는 운동이 발전해왔다. 증권 집단 소송제나 집중 투표제, 그리고 논의 중인 다중 주주 대표 소송제 등이 그러한 제도 사례들이다. 그러나 주주라고 하는 투자자의 이익이라는 제한된 관점을 넘기 어려움은 물론, 외국인 소수 주주에게 휘둘리기 십상이었다. 최근 개인주주가 아닌 연기금과 같은 공적 기금이 나서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일방적인 약자로서 견제는 고사하고 당하기만 했던 지역 자영업자들이나 납품 중소기업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 대기업 집단과 맞서려는 조짐도 보인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인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대기업과 협상할 단체 협상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공정거래법 안에 중소기업의 단체 협상을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으므로 시급히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재벌의 절대적 영향력을 견

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민들이 재벌 대기업의 제품을 쓰는 소비자로서 직접 나서서 재벌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들도 견제세력으로 집단화해야 한다. 최근 삼성과 엘지의 세탁기, TV 가격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바가 있다. 신용카드 대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에 맞선 중소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거부운동도 의미 있는 저항이다. 이밖에 통신비와 석유가격 독과점 가격 의문이 소비자 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풀어서 소비자, 상인, 중소기업들이 직접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대기업에 대한 소비자 운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벌의 견제세력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이처럼 재벌의 경제력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동네 상권까지 그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한국사회에서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우려할 만한 현실은 재벌 집단은 일찍이 ‘재벌 - 언론 - 학계 - 관료 엘리트’의 동맹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재벌의 지배동맹은 탄탄한데 국민들의 민주적 주권은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통합 진보당과 민주 통합당은 물론 보수적인 새누리당(한나라당)까지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최근 다시 재벌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과연 그런가? 일찍이 한 법학자는 이미 10년 전에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이 실패할 것을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적이 있다.


“재벌 개혁은 평상시에 민주적인 정부가 통상적인 권력행사의 방법을 통해서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아마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역사상 재벌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독일 두 나라밖에 없는데, 이들도 따지고 보면 재벌개혁을 자력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후 점령당국의 힘에 의지해서 강압적으로 실현하였기 때문이다.”⁴⁾

제대로 된 재벌개혁은 역사적으로 이 정도 심각한 상황에서나 제기될 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벌개혁 논쟁은 상당히 가볍고 책임성이 안 느껴진다. 선거의 계절이 끝나면 재벌 개혁이 ‘경제 성장과 세계적 경쟁력 회복’이라는 구호 뒤로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는 내려갈 것이고 상인들은 거대 유통대 기업들에게 자리를 빼앗길 것이며 소비자들은 독과점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수 년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99%운동과 저항이 세계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99%의 대책점에 선 1% 월가의 탐욕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1%는 재벌 대기업 집단이다. 때문에 일상적 시기에는 쉽게 제기되지 못하던 재벌개혁 요구가 외환위기 이후 실로 15년 만에 다시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재벌 개혁 기회를 정치권의 구호 성찬 한번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제대로 재벌개혁을 말하고 그 방안을 합의하고, 그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재벌개혁 시민연대’ 같은 단단한 시민 연대조직이 필요하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독재 정치 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전해왔다면, 지금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것이 최근까지 형성된 복지 동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진보를 향한 올바른 시민운동의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은 당위적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노동자와 소비자, 자영업과 상인, 중소기업인들을 포괄하는 ‘민생 연대’의 성격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99%의 연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4) 권오승, 2001,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재벌정책에 주는 의미”